

社說

다시 드러난 정부의 반통일성 —통일열기속 방북취재를 평가한다

서대기런 방북취재 무산

지난 12일 판문점에서의 남북학생회담이 실현되면서 성사될듯 하던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서대기런)방북취재가 13일 있을 예정이었던 2차 실무회담집회를 정부가 불허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되었다.

서대기런의 방북취재는 전대협·범민련과의 연대, 북측 범민족대회취재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정부측에 방북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

이에 정부측은 처음에는 방북취재를 반대했다가 전대협의 박성희·성용승대표가 범민족대회 남북대표단으로 입북할 것이 밝혀지자 서대기런을 이용해서 전대협을 고립시키려는 일련의 모습들을 보였다.

특히 서대기런에서 분명히 전대협·범민련과의 연대의 틀속에서 사업을 진행해오던 것을 묵인하면서 언론공작을 통해 서대기런 방북취재가 정부의 창구단일화를 인정하고 추진하는 것인 양 호도한 것이다.

정부의 반통일적 모습

정부는 노태우가 지난 7월 미·캐나다 방문 중 밝힌 '방북선언'에서 운동권학생, 재야인사의 남북자유교류를 허가하겠다고 했으며 통일연원단 건립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통일의의를 주도해 나가자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의 통일노력은 지난달 19일 통일원에서 방북취재를 위한 북한과의 접촉을 3일 만에 승인한 후의 모습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원의 승인을 받고 오상훈(한대면집장)방북취재준비위원장이 중국주재 북한대사관과의 접촉을 시도하려 했으나 같이 동행한 정부요원에 의해 감금당하여 접촉을 못하고 돌아온 사실을 볼때 정부는 겉으로는 허가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방해를 하는 행위를 일삼은 것이다.

또한 서대기런 방북취재를 위해 47년만에 판문점에서 최초로 열린 '남북학생회담'의 흥분이 채가기도 전에 북한측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2차 실무회담을 불허하는등 정부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는 것이라고 볼수가 없다.

정부측은 바로 전날인 12일까지만 해도 북한의 초청장과 신변안전보장장서만 있으면 언제라도 보내주겠노라고 실무회담 대표들에게 호언장담을 하였으며 창구단일화라는 내세워 애초부터 불허했던 전대협·범민련과의 연계를 은근히 부추기는 모습까지도 보였다.

그러나 정작 북한 조선학생위원회와의 실무회담에서 방북취재가 성사될 조짐이 보이자 접촉 자체를 불허하는 일관성없는 정책을 행해온 것이다.

이것은 90년부터 현재까지의 사회 각계각층에서 계속되어온 북한과의 자주적 교류를 추진해 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실례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88년부터 지속적으로 고양되어온 민중들의 통일열기에 의해 더이상 반통일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낼수 없었던 것이며 민중중도의 통일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척하면

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창구단일화라는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방북취재를 허용했던 것임에 틀림없다.

방북취재 과정의 문제점

한편 서대기런이 방북취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전대협·범민련과의 연대를 기본원칙으로 내세웠으면서도 내용적으로 더욱 굳건한 공유를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대협과 범민련이 정부에 의해 집중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대기런과의 연락이 일정치 않아 처음부터 논의를 해내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즉 서대기런의 방북취재는 전대협, 범민련 등과 함께 남한내 전체 운동세력들의 통일운동의 한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고립적으로 진행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대기런은 통일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정부가 방북취재를 성사시켜주는 듯한 정부의 창구단일화논리에 부응하는 듯한 언론공작에 일정정도 이용당하는 오류를 낳았다.

또한 서대기런의 방북취재에의 정부의 범민족대회 불허방침, 전대협 간부구속, 노동운동단 압 등 열악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공동기자단 구성과 준비활동등 거의 모든 활동을 비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서대기런소속 기자는 물론 일반민중에게 대한 선전 및 공유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제도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이용당해도 적절한 대응을 해내지 못한 점도 있다.

그러나 방북취재 공동기자단은 창구단일화라는 리에 따른 부분적 대북접촉 및 비정치적 교류만 허용한다는 정부의 허구적 논리를 폭로하고 이를 정면으로 돌파함으로써 자주적 교류추진의 모범을 보였다.

이상에서 정부에서 보여온 모습을 보았을때 정부가 선언한 방북선언은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 행정방식에 안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올해에도 8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학생 및 시민들 사이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활동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본교에서 열린 범민족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해외동포를 포함한 9만여명의 시민·학생이 참가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족대단결'의 대원칙

정부는 이와같은 국민들의 드높은 통일노력을 받아 안아 가시적인 전시행정이 아닌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책들을 펴나가야 할것이다.

또한 민족민주운동전영은 전국민적인 통일의지를 모아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평화를 위한 민족대단결'이라는 대원칙하에 군국평화,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통일된 조국, 통일된 새명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대의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이와 같은 말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서대기런)방북취재투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각각의 제도언론들은 정부의 수족인양 정부를 선전하고 서대기런의 움직임을 축소, 왜곡, 과장보도하는데 서로 열을 올리는 양태들을 참예하게 보여 온 것이 사실이

우선 언론의 대국민선전공작은 전대협을 고립시키는 것을 시발로 시작되었다.

조선일보 8월5일자 '전대협의 초조함'이라는 사실을 보면 전대협과 서대기런을 하나의 거대한 운동권이라는 테두리에 묶고 서대기런의 방북신청과 관련하여 박성희양의 방북을 잘아는 명석도 이용못하는 '정부의 공세에 초조해진 운동권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 신문과 방송들은 전대협, 범민

련과의 연대의 틀속에서 추진되어 오던 서대기런의 방북취재를 정부의 방북선언의 확대보도와 동시에 자주적 교류의 한부분으로써 진행되었던 통일원과의 접촉을 정부가 선지를 배풀고 적극 추진후 원한 것인양 왜곡선전해는 것이다.

하디못해 서대기런에서 계속적으로 친

방북취재관련 기성언론의 왜곡보도

명백한 '전대협, 범민련과의 연대, 범민족 대회의 추진' 부분을 기사에서 삭제해 버림으로써 정부측의 의도에 꼭 들어맞는 서대기런 방북취재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한편, 지난 12일 북측과의 실무회담 내용을 결렬, 이견이라는 표현으로 일관

함으로써 방북취재 일정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축소하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 다음날인 2차 실무회담이 정부측의 불허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3일 MBC 9시뉴스에서는 통일원 항의방문 등 서대기런의 입장맞춤적 입

들은 보도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불허 방침만을 축소보도하였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제도언론들은 정부의 반통일성, 즉 애초부터 방북취재를 보내지 않을 작정이었던 정부의 행동들을 정부의 유연성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정부는 통일의지가 있다는 명제로 국민

들에게 선전해온 것이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10여차례의 대서특필을 한 반면에 기성 언론들은 작은 기사로 축소보도했으며 범민족대회와 관련해서는 서대기런의 실무접촉을 크게 보도함으로써 범민족대회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봐왔듯이 기성언론들은 정부의 방북선언만을 필두로 하여 정부의 반통일적 의지들을 정부의 유연성으로 포장함으로써 해서 알맹이 없는 정부의 통일의지를 이용, 선전해 나가기에 급급했다.

정부의 반통일적 음모를 철저히 분쇄, 선전해 낼 수 있는 대항매체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기성언론들의 각성과 더불어 언론으로서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오세윤 記者)

교육 공무원 임용령

대학자율의 독버섯

—개악된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부쳐



작년 3월16일에 "사립학교법"이 개악된지 국회에서 통과되니 다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대다수의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1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번엔 통과된 개정안은 이미 개악된 사립학교법과 함께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화에 역행하는 독소조항들을 적지 않게 포함하고 있어 그동안 국·공립대학의 자율화와 사립대학의 발전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우려한 대학들의 강력한 반발과 재계정요구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7월8일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심의를 대학교육심의회에 의회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지만, 그 '재심'의 결과는 이미 알고 있듯이 극히 일부분을 수정한 채로 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통과되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엔 통과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 교수들의 신분에 직접관련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교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로, 교수신분의 법적지위의 격하이다. 이는 교수신분보장과 직결되는 교수임용(제11조3항)에 관한 중대한 사항들이 "교육공무원법"수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대통령 시행령"수준에서 규정되

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총·학장직선제에 관한 조항들이다. 의견상으로 총·학장직선제(제24조)를 보장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를 봉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후보추천 조항들을 살펴보면 △1인의 총장직선 대신 만두이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토록 한 조항 △또한 외부인사의

가 정년보장을 받기위해 세로이 설치되는 "정년보장교원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임용령'을 폐지한다고 여러번 공언했던 전 문교부의 약속을 공허하게 만들어 대학인들을 실망시켜 버렸다. 이번 시행령대로 된다면 앞으로 대학과 교수사회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흔히 짐작이 된다. 먼저

난 7월6일 임용령개정안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개정안에 대해 수정 및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및 사립학교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 협의회"(공대협)를 결성했다. 이 공대협은 전국 54개의 대학이 참여한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연합회'(사교연)와 14개 대학으로 구성된 '전국 국립대학

이에 앞서 '국교협'은 지난 6월 28일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교육분과 위원, 각 정당정책위원장 앞으로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내용에 대해 철회와 수정을 요구한바 있다. 그후 '공대협'은 신민당 김대중 총재와 민자당 김영삼대표를 국회에 찾아가 접촉했으며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에 광고문을 게재함으로써 우리의 요구를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요구를 무참히 거부되었다. 지난 7월18일 각 언론사에서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대학교에서 추천된 총·학장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거부권행사를 취소하는 외에 사실상 원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공대협'은 지난 7월23일~24일 이틀간에 걸쳐 "임용령 개정안"과 "사립학교법"개정을 위한 '철야대토론회'를 열어 전국의 10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과 우리의 요구를 주장한바 있으며, 지난 8월7일 부산일보 사 소강당에서 부산·경남지역 교수들이 모여 '임용령 개정안'의 부당성과 '사립학교법'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다.

원 응 순

(외대 영문과 교수·교수협의회 회장)

(고) (황) (단) (평)



"혹세 무민(惑世誣民)"

높이뛰는 지혜

휴식은 도약의 발판입니다.

무더웠던 방학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름내내 도서관을 지킴으로써?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습니까?
휴식을 통해 체력을 보강하였습니까?
건문을 넓이기 위해 해외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그럼, 어떤 자유를 만끽하였습니까?

이제는 마무리가 중요한 때입니다.
호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방학동안에 깨달은 새로운 경험을 발판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높이 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키웠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듯이
이제 높이 뛰는 지혜를 발휘해 봅시다.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POSCO메세지 ⑦ - 2학기 개강편

